

# 트럼프 당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 기업: 이차전지, 기계/방산,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정유

2024.11.07.

최주욱 기업1실 실장 02.368.5303 jwchoi@korearatings.com	송중휴 기업3실 실장 02.368.5465 huesong@korearatings.com	이지웅 기업4실 실장 02.368.5475 jwlee@korearatings.com	유준기 기업3실 전문위원 02.368.5315 yoojk@korearatings.com
---	--	--	--

## ❖ Summary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6일 오전 5시 34분(미 동부시간 기준)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7명을 확보하여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 선거일까지도 초접전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요 경합주의 승리로 비교적 이른 시점에 승부가 결정되었다. 트럼프의 임기는 2025년 1월 20일에 시작된다.

**통상/무역 정책과 에너지/환경 정책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정부는 트럼프 1기에 이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강력한 보호무역, 전통 제조업 부흥, 화석연료 우대 등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초와는 크게 다른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대중국 정책, 조세 정책, 외교/안보 정책과 더불어, 통상/무역 정책과 에너지/환경 정책이 국내 업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무역]**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고 고율의 보복관세를 활용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에너지/환경]** 트럼프는 전통 제조업을 부흥하고 화석연료 생산 확대로 에너지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파리기후 협약에서 재탈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IRA는 축소하거나 폐기하고자 한다.

### [양당 주요 공약 비교]

구분	민주당(해리스)	공화당(트럼프)
통상/무역	다자주의, 역내 자유무역 다자간 무역협정 강화, 동맹국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체 구축 관세 보다 간접제재 선호,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반대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국가 대 국가 간 협상을 통한 미국 이익 극대화 보편적 기본관세(10%) 도입, 고율의 보복관세 활용
에너지/환경(산업)	친환경 산업 육성, 첨단기술 투자 확대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에너지 전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반도체지원법, IRA 유지/강화(세액공제/보조금 유지)	전통 제조업 부흥 화석연료 생산 확대,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반도체지원법, IRA 축소/폐기(세액공제/보조금 축소/폐지)
공급망 & 대중국	온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병행 대중국 디리스팅(전략적 경쟁자): 사안별 위험 제거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수출 규제	온쇼어링으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공급망 중국 배제) 대중국 디커플링(전략적 독립): 강력한 규제 중국 최혜국 대우 철폐, 중국산 제품 60% 고율 관세 부과
조세	재정적자 해소 및 복지정책 확대 재원 마련 법인세율 인상(21%→28%) 고소득자 증세: 자본이득세 최고세율 인상(23.8%→33%)	기업활동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법인세율 인하(21%→20%, 미국 내 생산기업 15%) 개인소득자 감세: 25년 일몰 예정인 감세법안(TCJA) 영구화
외교/안보	동맹국 및 나토와의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이스라엘 지원 & 인도주의 노력 전략적 공격 억제, 동맹국 협력을 통한 집단 안보 강화	동맹국 및 나토 비용 분담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개입 최소화, 친이스라엘 정책 강화 미국 본토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중점

자료) 시장자료 취합, KR Risk Dashboard\_2024.10 재인용

이차전지, 기계/방산, 철강, 반도체, 자동차의 5개 업종은 트럼프 당선이 사업환경에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된 반면, 정유업과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예상된다.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거나 미국 정책에 대한 노출도가 높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8개 업종에 대해 산업별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차전지업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환경규제 완화와 IRA 폐지 및 축소로 전동화 전환이 지연되고 이차전지 수요가 위축되면서 현재의 부정적 사업환경이 이어지고 업황 반등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이차전지 업체는 전동화 전환 지연에 따른 수요 위축과 AMPC 보조금 등 인센티브 축소로 사업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방산업의 경우, 주택·생산시설 및 전력공급 확대와 더불어 사회 인프라 확충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세계적인 군비 확장 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및 보호무역주의를 계획하는 등 강도 높은 통상·무역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측면에서 비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된다.

정유업은 트럼프2기에서 친환경 정책의 속도 둔화로 석유/정유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부담이 경감되면서 보다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예상된다. 한편, 조선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글로벌 해상물동량 성장 둔화로 선박 수요가 위축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LNG선의 수요 확대로 인해 우호적인 업황이 예상된다.

석유화학업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영향이 중립적이며, 나머지 업종의 경우 트럼프 당선으로 사업환경이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산업	산업별 영향
이차전지	- 바이든 정부의 환경규제, 전동화 전환 장려책 폐지 및 축소 전망 - IRA 생산세액공제 전면 폐기, 차량 연비규제 완화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한 대중 견제 - 글로벌 배터리 수요 성장세 둔화, 사업환경 부정적 영향 가중 전망
기계/방산	- 제조업 재건 등으로 전력망 확충, 설비투자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확대 -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에 따른 리스크 내재 -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로 각 국 방위비 지출 확대 전망 - 미국 방산업체 제조역량 제고에 따른 경쟁심화 가능성 내재
철강	- 관세 인상,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장벽 강화 - 주요국 무역 규제조치 확산 등에 따른 교역 환경 불확실성 확대 - 수출 마진 감소, 역내 공급과잉 부담 심화 가능성 존재
반도체	- 자국 제조기반 확보 과정 상 지원정책 축소 또는 투자 요구조건 강화 - 범용제품 및 레거시 공정을 포함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 강화 - 보편적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약화
자동차	- IRA 전기차 보조금 및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축소·폐지 - 보편 관세 부과(10%+@, 중국은 60%+@) - legacy 완성차업체 간 경쟁 심화, 현지 생산 CAPA 확보 필요
석유화학	- 중단기 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 다소 완화 -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내지 침체 등으로 수요 약세 - 스프레드, 공급과잉 해소로 단기 회복 예상되나, 중장기 수급 약화 전망
조선	- 전통 에너지 부흥으로 LNG선 수요 확대·연장 예상 - 중국 배제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조선업 영향은 제한적 -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장기 선박 수요에 부정적 요인
정유	- 유가, 중단기 약세 예상 - 친환경 정책의 속도 둔화로 석유/정유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부담 경감 - 정유시설에 대한 투자 크지 않아 양호한 마진 예상

주) 트럼프 2기에서 푸른색 음영은 보다 비우호적, 붉은색 음영은 보다 우호적

**Contents**

I. [이차전지업]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 영향 가중될 전망 ..... 4

II. [기계/방산업] 트럼프 당선으로 비우호적 환경 예상 ..... 6

III. [철강업]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 영향 다소 확대될 전망 ..... 8

IV. [반도체업]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 영향 다소 확대될 전망 ..... 11

V. [자동차업] 트럼프 당선으로 다소 비우호적 환경 예상 ..... 14

VI. [석유화학업] 미국 대선 영향, 중립적일 전망 ..... 15

VII. [조선업]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 우호적이나 장기 위험요인 내재 ..... 16

VIII. [정유업] 트럼프 당선으로 더 우호적 환경 예상 ..... 18

## 1. [이차전지업]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 영향 가중될 전망

트럼프 당선으로 현재의 부정적 사업환경이 이어지고 업황 반등의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 완화와 IRA 폐지 및 축소로 전동화 전환이 지연되고 이차전지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국내 이차전지 업체는 전동화 전환 지연에 따른 수요 위축과 AMPC 보조금 등 인센티브 축소로 사업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고강도의 대중 견제 기조를 밝히고 있어 미국시장 내 국내 이차전지 업체의 대중 경쟁우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이든 정부의 환경규제, 전동화 전환 장려책 폐지 및 축소 전망
- IRA 생산세액공제 전면 폐기, 차량 연비규제 완화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한 대중 견제
- 글로벌 배터리 수요 성장세 둔화, 사업환경 부정적 영향 가중 전망

### 바이든 정부, 전동화 전환책 추진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성명 발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배터리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특히, IRA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급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를 통해 미국 내 전기차 보급과 배터리 수요를 크게 늘렸고, 생산 및 투자를 촉진하였다.

### 대중 견제 조치 시행

막대한 내수시장을 토대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중국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조치를 취해 미국 시장 진입을 억제하였다. 해외우려국(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제도 시행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을 장려하였고, 2024년 5월에는 대중 관세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기존 25%),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에 대해 25%(기존 7.5%)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에 있어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일례로 셀 업체의 경우 AMPC 보조금 수익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의 생산/판매가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전방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따른 부정적 사업환경에서도 국내 이차전지 업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환경적 배경이 되었다.

### 트럼프 2기, 전동화 전환책 축소

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 온 환경규제 및 전기차 관련 보조금 및 장려책을 폐지 및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을 ‘녹색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하고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며 IRA 세액공제의 전면 폐기, 전기차 전환의무 폐지를 공언하였으며,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및 차량 연비규제 최소수준 완화 등의 주장 또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는 2023년 9월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폐지안이 담긴 ‘Drive American Act’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IRA 법안의 경우 켄터키, 테네시 등 국내 이차전지 업체의 투자가 집중된 수혜지역의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점과 지역구별 이해관계를 감안할 시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지원 규모 축소가 예상되어 전동화 전환을 촉진하던 각종 인센티브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트럼프 2기 이차전지 산업 관련 예상 주요 정책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환경	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폐지 또는 축소 내연기관 차량 생산 장려 차량 연비규제 완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관세	대중관세 단계적 인상(최대 60% 부과)

자료) 시장자료 취합

**대중 견제는 유지**

다만,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는 트럼프 2기에 들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와 대중 관세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대중 무역 강경책이 고수될 것으로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성장세 둔화, 업황 반등 시점 지연**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내 전기차 보급 확산이 억제되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고 업황 반등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전기차 보조금 축소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보조금 및 지원책이 축소될 경우 전기차 보급이 위축되고 본격적인 이차전지 수요 둔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지원 축소와 함께 내연기관 차량 생산 증대를 장려함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전환 계획이 크게 수정되고 이차전지 업체의 신공장 투자 및 가동 일정도 영향을 받아 신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영향 가중 전망**

트럼프 2기에서 국내 이차전지 업체는 전동화 전환 지연에 따른 수요 위축과 AMPC 보조금 등 인센티브 축소로 사업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셀 3사가 2024년 상반기 합산 8,417억원(전년 동기 대비 4,735억원 증가)의 AMPC 보조금 수익을 인식하였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이 저하된 점을 감안하면 AMPC 보조금 철폐는 셀 업체의 즉각적인 영업실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셀 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이 이미 업황 둔화의 여파로 2023년 하반기 이후 영업실적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부정적 사업환경 도래는 다수 이차전지 업체의 부진한 영업실적 지속 및 재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시장 대중 경쟁우위 유지 가능**

트럼프 2기에서도 미국시장 내 국내 이차전지 업체의 대중 경쟁우위는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IRA 및 FEOC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높은 관세 부과가 중국산 전기차 및 이차전지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II. [기계/방산업] 트럼프 당선으로 비우호적인 환경 예상

트럼프 2기에서는 주택·생산시설 및 전력공급 확대와 더불어 사회 인프라 확충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군비 확장 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 및 보호무역주의를 계획하는 등 강도 높은 통상·무역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측면에서 비우호적인 환경이 예상된다. 산업 내 분석 대상 업종은 전력기기, 발전기기, 건설기계, 방위산업이다.

- 제조업 재건 등으로 전력망 확충, 설비투자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확대
-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에 따른 리스크 내재
- 미국의 군사개입 축소로 각 국 방위비 지출 확대 전망
- 미국 방산업체 제조역량 제고에 따른 경쟁심화 가능성 내재

### 바이든 정부,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동맹국 중심의 통상·안보 정책 수립

바이든 정부는 II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를 통해 전력인프라를 포함한 노후 인프라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IRA와 반도체지원법(CHIPS Acts) 등을 통해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생산 확대 및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유도하였다. 또한 탈중국, NATO 동맹 강화 등 동맹국 중심의 통상·안보 정책을 추진하여 비동맹과의 구분을 확고히 하였다.

이는 한국 기계/방산업에 우호적인 업황을 제공하였다. 전력기기 업종의 경우, 노후 전력인프라 교체와 함께 미국 내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수요 또한 발생하면서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발전기기 업종의 경우 미국 내 수주 등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IRA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원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유도하였다.

건설기계 업종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사회 인프라 재건, 산업설비 건설 등 비주택 건설 확대에 힘입어 2022년~2023년 호실적을 기록하였다.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재래식무기가 소진된 가운데, 동맹국 중심의 통상·안보 협력이 이루어진 점이 수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미국향 지대함 미사일, 노후 함정 MRO 사업 수주를 시도하는 등 미국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트럼프 2기, 고립주의·자국우선주의 재현

트럼프 2기에서도 탈중국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방위적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 대비 고립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통상정책의 경우,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하고,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여 모든 수입품에 10%p의 관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고자 하며, 이들에게 최저가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IRA를 폐지하고 친환경 발전소가 아닌 화력, 수력, 원자력 등을 활용한 전력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미국 내 원유·천연가스 개발이 확대되고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제공되며, 원자력 발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국방·안보 정책의 경우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NATO의 방위비 지출 가이드라인(기존 GDP의 2%)을 3%로 인상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각자도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수요 확대,  
인프라 투자 정책 등  
감안 시 수요 양호**

인공지능(AI) 기술의 혁신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 암호화폐 채굴, 미국 내 제조기반 확대, 전기화, 기후변화로 인한 냉난방 수요 증가로 전력 소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기기와 발전기기 시장 수요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기계 업종의 경우에도 온소어링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고 10개의 신도시(Freedom City)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보호무역에 따른  
리스크 내재**

그러나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를 감안 시 현지 생산공장이 부재할 경우 대규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현지에 일정 수준의 Capa를 갖춘 전력기기 3사(HD현대, LS, 효성)와 달리 발전기기와 건설기계 업체들은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FTA 체결국가에 대한 관세 규정이 상세히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성을 감안하면 미국 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

NATO 국가들에게 방위비 확대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트럼프 2기 정부의 미국은 타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각 국의 무기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중심의 공급망 형성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비공 수출, 노후 함정 MRO 사업 수주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방산업체의 제조역량이 제고되는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 글로벌 무기수요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방산 업황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트럼프 2기 기계/방산업 관련 주요 통상/안보/인프라/에너지 정책

구분	내용
보호무역주의	트럼프상호무역법(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부과), 보편적 기본 관세(모든 수입품에 대해 10%p의 관세를 추가 부과)
군사개입 축소	NATO 방위비 가이드라인 인상(GDP의 2% → 3%), 러-우 전쟁과 유럽 관여 중단
IRA폐지	화석연료 생산기업에 세액 공제, 석유·천연가스 개발 확대, 원자력 에너지 생산 장려
제조업 재건	보호무역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비용 최소화
인프라투자	10개의 미래형 신도시 건설, 연방정부 토지에 주택 건설 허용 및 관련 규제 완화

자료) 시장자료 취합

### III. [철강업]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 영향 다소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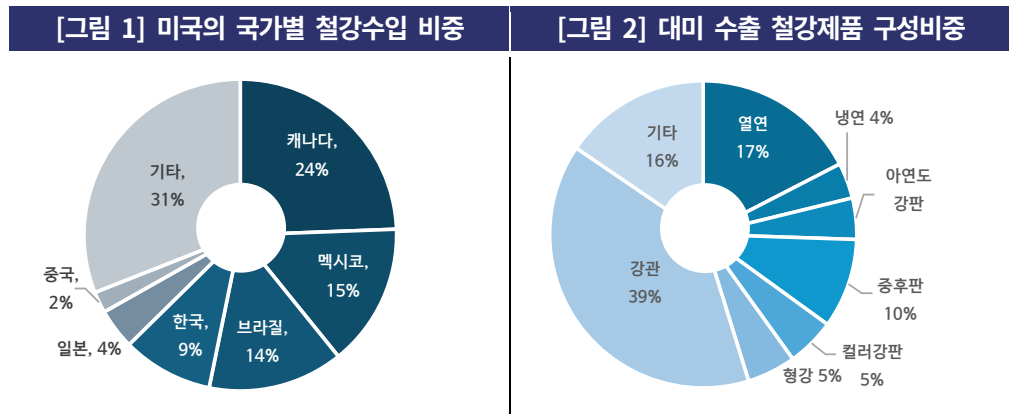
양당의 자국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육성 의지를 감안하면 국내 철강업의 비우호적 대미 수출 환경이 이어지겠지만,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보편적 관세 부과 조치가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한편, 여타 수출국들의 보호무역 기조를 심화시켜 중국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 증가 등 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관세 인상,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장벽 강화
- 주요국 무역 규제조치 확산 등에 따른 교역 환경 불확실성 확대
- 수출 마진 감소, 역내 공급과잉 부담 심화 가능성 존재

#### 중국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수혜 제한적

국내 철강산업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0% 초반 수준이다. 내수는 연 5천만톤 내외로 정체되고 있어 수출의존도가 점증하고 있으나, 미국향 수출은 2018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연간 263만톤의 수입할당제(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강종별로는 강관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향방에 따라 송유관 및 유정관 등의 수요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철강시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흑자 분야로서, 자국 제조업 보호에 초점을 둔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등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무역규제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미국의 철강 수출입 관련 정책은 중국 제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겠지만, 한국의 대미 철강 무역이 흑자를 보이고 있어,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이 낮고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강화가 가져올 반사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 2023년 기준  
자료) 한국철강협회, 스틸데일리, 한국기업평가

#### 바이든 정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조치 강화

바이든 정부는 2024년 5월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7.5%에서 25%로 높이는 대중 무역법 301조 관세 인상안 발표에 이어, 7월 중국 철강 제품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재부과 조치를 발표하였다. 미국은 기존에도 중국산 주요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고율의 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2023년 기준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저가 철강재 수출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대응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 제재를 목적으로 2018년 추진한 경제안보 정책인 무역확장법 232조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점은 자국의 전통 제조산업 보호 및 중국 견제가 초당적인 정책기조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3] 바이든 행정부의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

시기	주요 내용
2024.07	바이든 대통령,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 발표 -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재 중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제품 대상 - 철강 25%, 알루미늄 10%
2024.09	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안 최종 발표 - 철강·알루미늄 관세율 0~7.5% → 25.0% 상향 (2024년 10월부터 적용)

자료) 언론자료 취합

**트럼프 2기,  
관세 인상 등 전통적  
무역장벽 강화 예상**

트럼프 1기에서는 2017년 집권과 함께 중국 견제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2018년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국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AD), 상계관세(CVD) 등 높은 수준의 특별관세 조치를 실행하면서 대중 무역장벽을 강화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최고 60%) 및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MFN) 철폐, 상호주의 관세 등을 공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기 정부 출범 시 관세 및 수입할당제(쿼터) 등 전통적인 방식의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트럼프의 철강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공약

시기	주요 내용
2018.04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발표 -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보편 관세 부과 - 한국, 호주, 브라질 등은 관세 면세 대신 별도의 관세수입할당제(쿼터) 협의 - 캐나다, 멕시코 향 관세조치는 2019년 철회 및 별도 협정 채택
2023~	트럼프 당선자, 관세 인상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 강화 정책 공약 -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10~20%) 도입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최고 60%) 도입 - 자국산 제품에 부과된 것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 관세 도입

자료) 언론보도자료 취합

**교역환경 악화,  
수출마진 감소 및  
수급부담 확대 우려**

미국의 보편적 관세 부과조치는 철강제품 수출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 확보에 즉각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수입 철강재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타 국가들의 무역규제조치 확산을 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입규제 강도가 높지 않은 국내시장으로의 중국 철강재 유입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 조정과 경기부양책을 통한 수요 회복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중국산 철강재 수입 확대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 공급과잉 및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 철강산업은 대미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전통적인 관세 규정 및 쿼터 장벽이 현 수준 대비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방국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역정책 추진 및 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표 5] 주요국의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현황

국가	주요 내용
미국	-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수입 철강재 대상 25% 추가 관세 부과('18.4) - 통상법 301조에 근거, 수입 철강재 대상 관세율 7.5% → 25% 상향('24.9)
멕시코	- 수입 철강 등 주요 품목 대상 관세 5~50%로 인상('24.4)
브라질	-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쿼터 적용 및 쿼터 초과시 25% 관세 적용 발표('24.4)
칠레	- 중국산 철근 24.9%, 단조 강구 33.5% 잠정 관세 부과 발표('24.4)
아세안	- 인니, 중국산 열연, 형강 등에 반덤핑 조치 적용 중 - 베트남, 중국산 STS냉연강판, 칼라강판, H형강 등에 반덤핑 조치 적용 중 - 태국, 중국산 열연코일/강판, 석도강판, STS냉연강판 등에 반덤핑 조치 적용 중

자료) 한국철강협회

**무역규제 정책  
도입 및 파급효과,  
수급 영향 등  
모니터링 필요**

2022년 이후 자국 수요부진에 따른 중국의 철강 수출 증가는 글로벌 공급과잉 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 역시 주요 전방산업 수요 둔화와 함께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증가로 가격 경쟁 및 수익성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자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무역장벽 확대는 EU 및 아시아 국가들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이어지며 역내 공급과잉 확대 및 국내 철강업계의 추가적인 수출환경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규제정책 도입 내용과 이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무역구제조치 대응 수준,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여부와 주요 업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 대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투자 대응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반도체업] 트럼프 당선으로 부정적 영향 다소 확대될 전망

미국의 첨단 반도체산업 보호·육성과 중국 견제 필요성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의 초당적인 전략기조로 자리잡고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정책과 대중 제재조치 변화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축소하거나 투자 요구조건을 높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범위의 확대 가능성은 국내 반도체 업계의 대중 생산 및 판매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외 생산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공급망 구조 상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조치 역시 대미 수출제품에 대한 일정수준의 마진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자국 제조기반 확보 과정 상 지원정책 축소 또는 투자 요구조건 강화
- 범용제품 및 레거시 공정을 포함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 강화
- 보편적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채산성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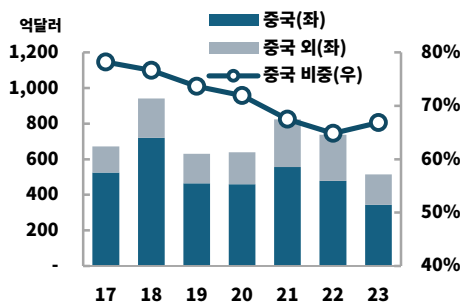
#### 대중 기술 제재로 인한 부정적 파급 효과 우려

우리나라의 대중(홍콩 포함) 메모리반도체 수출비중은 2017년 78%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기준 6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PC, 모바일 등을 전방 수요처로 둔 범용 메모리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기반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시안공장은 전체 NAND 생산의 28%, SK하이닉스의 우시 및 다렘공장은 각각 전체 DRAM의 41%, NAND의 31%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중국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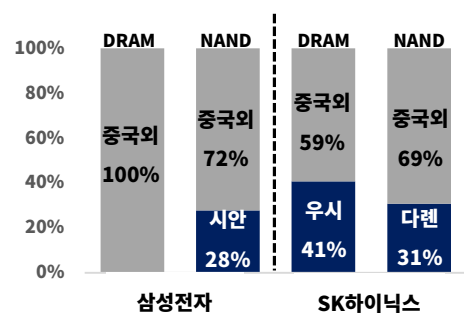
트럼프 1기에 시작된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중국 반도체 산업 견제 정책은 바이든 정부 들어 반도체지원법(CHIPS Acts) 등 한층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고,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견제로 첨단기술 확보가 어려운 중국 반도체 업계는 구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생산능력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급률 상승은 국내 업체들의 수출 판매기반 위축과 범용제품 중심의 메모리 공급과잉 부담 확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중국 첨단산업 제재 정책 변화가 국내 업계의 대중 생산 및 판매기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미국 내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생산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투자 의사결정 및 투자비용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3] 국내 메모리반도체 대중 수출액 추이



[그림 4] 국내 메모리업체 생산설비 비중('24.1Q)



자료) 산업자료 취합, 한국기업평가

**바이든 정부,  
반도체산업 육성 및  
대중 제재 구체화**

바이든 정부가 2022년 도입한 반도체지원법은 보조금 지원정책을 통한 자국 반도체 생산기반 확충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영향력 축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3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지원금 수혜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제조시설 확장 또는 구축 금지(10년)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국내 메모리 제조사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D, Validated End-User) 지정, 2024년 상반기 메모리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발표 등 관련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고 있다.

**[표 6] 주요 반도체 업체의 투자 및 보조금 지원계획**

기업명	보조금(A)	투자액(B)	(A/B)	주요 내용
삼성전자	64	450	14%	파운드리공장(텍사스주)
SK하이닉스	5	39	12%	어드밴스트 패키징공장(인디애나주)
마이크론	61	1,150	5%	신규 메모리 Fab 건설(아이다호주)
인텔	85	1,000	9%	신규 Fab 건설(애리조나, 인디애나주)
TSMC	66	650	10%	3개 신규 Fab 건설(애리조나주)

단위) 억 달러  
자료) 언론보도자료 취합

**트럼프 2기,  
지원정책 변경에 따른  
부정적 영향 내재**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과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해 왔으므로 2기 정부 출범 시 관련 법에 따른 정책 추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은 산업 패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반도체지원법이 전면 폐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따라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지원 비중을 더 높이거나, 동맹국을 대상으로 가드레일 조항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한 제반 요구 조건을 높일 수 있다. 지원금 규모 축소나 현지 투자에 대한 요구조건 강화는 생산설비 투자자금 및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2기에서는 고성능 메모리 제품군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층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 메모리 수출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경우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중국 생산설비 운영과 대중 수출 판매기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중국 견제 심화시  
수급 약화 가능성**

트럼프 2기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20%의 보편적 기본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 채산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메모리 수급 개선을 전제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교섭력과 제품 경쟁력 등을 감안 시 부정적 영향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보편관세 도입에 따른 대미 IT제품 수출 위축은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트럼프 1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산업 규제에 대응하여 자국 반도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자국 세트업체들을 통한 견고한 내수기반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에 힘입어 중국 메모리 제조업체들의 생산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강화가 중국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경우,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급과잉 부담 확대 및 판가 경쟁 심화로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중 견제 정책기조  
강화 수준 및  
국내업체 대응전략  
모니터링 필요

미·중 기술 패권경쟁과 대중 반도체 산업 견제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 중국 Fab 설비능력 향상 제한에 따른 생산효율성 저하 및 원가부담 상승,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에 수반되는 투자부담 증가,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능력 증강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첨단 반도체를 안보 상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미국은 자국 내 생산설비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 첨단산업 성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 장비 반입 규제 등도 이어갈 전망이다. 국내 업체들은 이러한 대중 견제 정책기조 유지를 전제로 생산기반 다각화 및 제품포트폴리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중국 첨단산업 견제 정책 추진 내용과 이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계의 사업안정성 영향, 업체별 사업·투자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표 7] 미국의 대중 반도체 관련 제재 정책 추진 현황

시기	주요 내용
2018.10	중국 DRAM 제조사 푸젠진화반도체(JHICC)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제한
2019.05	중국 화웨이(Huawei) 블랙리스트(수출 통제명단) 지정
2019.11	ASML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
2020.05	화웨이에 반도체 제재 부과(자회사 하이실리콘 및 TSMC와의 거래 중단)
2020.09	파운드리 업체 SMIC 등 59개 중국기업에 대한 미국 장비부품 기업에 사전심사 의무화
2021.04	중국 슈퍼컴퓨팅 업체 7개사 블랙리스트 지정
2022.10	첨단 반도체 및 장비 대중 수출 금지조치 발표 - 18nm DRAM, 128단 이상 NAND, 14nm 이하 로직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 및 제조장비, 관련 인력의 중국과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
2023.03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규정 초안 발표
2023.09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최종안 확정 (2023년 11월부터 적용) - 미국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의 미국 외 국가 사용 금지 - 해외 우려단체와의 공동 연구 등 제한 -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우려국에서의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및 신축 금지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구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 금지)
2024.10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행정명령 시행 최종규칙 발표 - 투자 통제 예정인 기술·제품 분야는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 관련 자본투자가 금지 항목에 포함 -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 통제 목적

자료) 언론보도자료 취합

V. [자동차업] 트럼프 당선으로 다소 비우호적 환경 예상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IRA 축소·폐지, 보편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영업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업계에 다소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대차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파워트레인별 경쟁력, 혼류 생산 측면의 강점과 조지아 메타플랜트(HMGMA) 준공을 통한 현지 생산 능력 확대 등을 통해 미국 시장의 영업환경 변화에 일정 수준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IRA 전기차 보조금 및 기업평균연비규제(CAFÉ) 축소·폐지
- 보편 관세 부과(10%+@, 중국은 60%+@)
- legacy 완성차업체 간 경쟁 심화, 현지 생산 CAPA 확보 필요

**트럼프 2기, Legacy 완성차 업체 간 경쟁 심화 예상**

친환경 정책의 후퇴는 전기차 수요자로 하여금 더욱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하고 공급자에게는 환경 규제 충족을 위한 전기차 생산 유인을 제거하면서 전기차 시장 전반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수요·공급 측면의 니즈가 확대되면서 북미 Big 3(GM, Ford, Stellantis), 현대차그룹, Toyota그룹 등 legacy 완성차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Tesla, Rivian 등 순수 전기차업체의 미국 시장 내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트레인별 보유 경쟁력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 완화**

legacy 완성차업체의 경쟁 심화가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차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파워트레인별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내 안정적인 판매량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수요에 대해서도 현대차그룹, Toyota그룹 등 아시아계 완성차업체가 북미 Big 3 대비 높은 수준의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를 통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주요 볼륨 차종에 대한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지속하면서 하이브리드 판매량 증가에 기반한 높은 수익성 향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EREV(Extend Range EV) 등 새로운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개발·출시도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 관세 회피를 위한 현지 CAPA 확대 필요**

한편 보편 관세 부과는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부정적인 요소로서 현지 생산 확대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60% 이상이 수출 물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 등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알라바마 공장(연 39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연 35만대)과 더불어 메타플랜트(연 30만대, 최대 50만대) 준공을 통해 미국 도매 판매량 기준 약 60%의 생산 CAPA를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40%에 달하는 물량이 관세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 시 현지 공장 증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관세 부과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부품 배제 과정에서 국내 부품사 수혜 예상**

부품사의 경우 현지 생산 확대 및 중국산 부품 배제 과정에서 수출 증가 등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100% 이상) 부과, 중국산 부품 전반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 등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을 전면 배제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중국산 부품이 공급망에서 배제될 경우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부품 공급사 변경 과정에서 현지 진출한 국내 부품사가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 등 우호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기차 관련 부품을 주력으로 하는 부품사의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감소로 인한 실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

VI. [석유화학업] 미국 대선 영향, 중립적일 전망

미국 대선 결과가 석유화학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 본다. 업황을 좌우하는 핵심은 석유화학제품 수급으로, 미 대선 결과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는 유가 하락 모멘텀이 원가 부담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수요를 보다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 중단기 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 다소 완화
-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내지 침체 등으로 수요 약세
- 스프레드, 공급과잉 해소로 단기 회복 예상되나, 중장기 수급 악화 전망

트럼프 2기,  
유가 및 규제 측면  
긍정적

트럼프 2기에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으로 중단기 유가의 하락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납사 기반의 국내 NCC 기업에게 원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 상황에 따라 원료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수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실질적인 원가부담 완화 효과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는 환경보호청이 제시한 주요 환경 규제를 폐기할 계획으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석유화학 수요에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 수요 측면  
부정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대중 관세율 인상, 우회 수출 차단, 무역 부정행위 단속 강화 등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어 석유화학 수요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1기에서 2018년 중반 이후 중국 수입관세를 인상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된 결과, 2019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5% 감소하였고,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8년 3.6%에서 2019년 2.8%로 하락하였다. 트럼프 2기는 대중 관세를 단계별로 인상하여 최대 60% 부과하겠다고 공약하고 최혜국 대우를 철폐하는 등 대중 무역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어 트럼프 1기에서 보여주었던 글로벌 경기 하락이 재현될 여지가 충분하다.

석유화학 영향 중립적

트럼프 정부에서 예상되는 석유화학 제품 관련 규제 완화, 원가 하락 가능성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중국의 수요 성장 둔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석유화학 산업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공급 부담 주체는  
중국

트럼프 2기에서도 석유화학 공급 부담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일 것으로 본다. 수요 기반이 약화되더라도 공급망 자립 목표를 위해 계획한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증설 물량이 크지 않아 수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 강경책이 수요 성장을 제약하여 회복 수준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 중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하의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 증설 부담 확대 등으로 역내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업황 다운사이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프레드 단기 회복,  
중장기 약세 전망

트럼프 2기에서도 석유화학 스프레드는 단기 회복하겠지만, 중장기로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 완화 효과가 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강화된 보호무역으로 중국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계속되는 증설로 공급 부담이 커지면서 스프레드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Ⅶ. [조선업] 트럼프 당선으로 단기 우호적이나 장기 위험요인 내재

트럼프 2기에서 단기적으로 조선업에 우호적인 업황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석유·가스 등 전통 에너지원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로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 우위가 확고한 LNG선의 수요가 확대·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향후 글로벌 해상물동량 성장이 둔화되고 선박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친환경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국내 조선업계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전통 에너지 부흥으로 LNG선 수요 확대·연장 예상
- 중국 배제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조선업 영향은 제한적
-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장기 선박 수요에 부정적 요인

전통 에너지 부흥으로  
LNG선 수요  
확대·연장 예상

트럼프 2기 정부는 전통 에너지를 재조명하며 미국 내 석유·가스의 생산 및 수출을 진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정부는 올해 초에 LNG 수출이 에너지 비용과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다며 신규 LNG 수출 터미널 승인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 LNG 수출 터미널에 대한 신속한 승인과 더불어 추후 진행될 기본설계(FEED) 단계 프로젝트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 조선업계의 주력 선종인 LNG선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LNG 프로젝트가 새롭게 개발되면 해당 가스전에서 향후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에 근거하여 LNG선 발주가 진행된다. 현재 일부 중국 조선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LNG선 건조 역량을 갖춘 조선소는 국내 Big 4 조선업체로 한정되어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 내 추진 중인 다수 LNG 프로젝트들의 개발이 촉진·가속화되는 경우 국내 조선사가 상당부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인 LNG의 수요가 축소될 것이나, 트럼프 2기에서는 그 이행 시기가 지연되고 그에 따라 LNG선의 수요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배제 공급망  
구축 정책의 영향은  
제한적

트럼프 2기는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에서 트럼프의 공급망 구상이 그대로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선시장에서 중국은 상당기간 높은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벌크선, 탱커선,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다수 선종에서 선두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조선업 경쟁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미국이 중단기간내 자국 주도의 조선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선박의 수요 주체인 주요 선주들도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국의 비중이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기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표 8] 트럼프 2기 조선업 관련 주요 정책방향 및 기대효과

구분	정책 방향	정책 효과·내용	
산업정책	환경·에너지	친환경정책 후퇴, 전통 에너지원 재조명	석유·가스 생산수출 확대
	공급망	리쇼어링 통한 제조업 육성	수입 대체, 공급망 내 중국 배제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보편·상호 관세(중국 관세 60%)

자료) 시장자료 취합

---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장기 선박 수요에  
부정적 요인**

---

트럼프 2기의 무역통상정책도 공급망 관련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타국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신조 선박 발주의 기반이 되는 글로벌 교역량 성장이 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경우 조선업 수요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의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잔고가 3년치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대응은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기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경우 조선업의 수요 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므로 트럼프 당선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Ⅷ. [정유업] 트럼프 당선으로 더 우호적 환경 예상

트럼프 2기에서 더 우호적인 업황이 예상된다. 공급 확대로 유가가 중단기 약세 전환될 수 있지만, 수요 확대를 통해 양호한 마진이 기대된다. 전기차 캐즘의 장기화로 드라이빙 수요 역시 하방경직성을 확보할 것이다.

- 유가 중단기 약세 예상
- 친환경 정책의 속도 둔화로 석유/정유기업들의 친환경 투자 부담 경감
- 마진, 정유시설에 대한 투자 크지 않아 양호한 마진 예상

바이든 정부,  
전통 에너지 억제  
정책 시행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원을 우선하였고, 전통 에너지원의 공급을 제약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취임 직후 키스톤 프로젝트허가를 취소하였고, 공공부지에서의 채굴 비용을 인상하였고 해양 시추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올해 2월에는 LNG 수출이 에너지 비용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LNG 수출 터미널의 신규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바이든 4년차인 2024년에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은 올해 3월 미국 내 BEV 판매 목표를 2027년 36%에서 26%로, 2032년 67%에서 56%로 하향하였다. 완성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배기가스 규제 적용 시기 역시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연기하였고, 자동차가 포함된 수송부문에 대한 203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49%(2022년 4월 발표, 56%)로 조정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공급 측면을 제약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수요 증가 및 공급 변동 상황에서의 대응력에 한계를 보였다. 친환경 에너지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석유 및 화학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 가격 전반의 상승을 야기하는 그린플레이션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석유 공급 측면의 제약은 유가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바이든 정부는 유가 안정화를 위하여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면서 유가 상승을 억제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중단기 유가 하락

트럼프 2기에서는 유가에 중단기 하락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전통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여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을 예고하였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약된 셰일오일의 공급이 증가하면서, 중단기 유가의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정책 철회,  
IRA 축소/약화

트럼프 2기에서 친환경정책은 후퇴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반도체지원법 및 IRA 철폐 또는 지원 축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IRA가 양당이 합의한 법률이며, 해당 법안으로 신설된 생산 시설이 공화당 지지층 우세 지역이라 법안 폐지가 힘들 수 있지만, 행정명령이나 BEV 목표 하향, 미국 자동차기업과의 AMPC 배분 압박 등을 통해 바이든 1기의 친환경 정책 효과를 상당히 희석시킬 수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듯, 이번에도 대통령 취임 직후 재탈퇴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경제제재 및 석유 금수조치 약화/폐쇄

트럼프 2기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조기 종결될 경우 석유 공급에 대한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완화되어 러시아 석유의 금수 조치가 철회되면, 러시아 석유의 공급에 제한이 사라진다. 현재도 러시아 원유가 인도와 중국 등을 통하여 수출되고 있어 러시아 석유가 시장 공급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및 유럽의 원유 구매처가 러시아를 포함하는 쪽으로 다양해질 것이며, 중동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정도의 지정학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러시아 석유의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 석유는 금수조치를 피해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되었지만, 전쟁 이전 대비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해당 차액은 인도와 중국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원유의 디스카운트는 러시아의 생산능력 등을 감안할 때, 벤치마크 유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우랄 원유의 디스카운트는 금수 조치 시행 이후 가장 컸고, 이후 축소되는 추이를 보였지만, 금수 조치 해제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므로, 벤치마크 유가 및 석유제품의 가격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2기에서 미국 내 공급이 가파르게 확대되어 유가가 빠르게 하락할 경우 전략비축유의 매입 유인이 확대된다. 과거 수준으로의 재고를 목표로 한다면 대략 3억배럴의 축적이 필요하다. 1년 내에 재매입한다면, 82만b/d의 수요로 치환되며, 미국의 일일 생산량의 6%에 해당한다. 트럼프 2기에서 유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전략비축유 재매입 수요가 유가 하방을 일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트럼프 2기에서는 공급 확대로 유가에 하락 모멘텀이 발생하겠지만, 전술한 전략비축유 매입이나 러시아 원유의 디스카운트 약화 등의 요인이 하락 유인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정제마진은 양호할 전망

트럼프 2기에서도 정제마진은 양호할 전망이다. 친환경정책이 후퇴하고, 미국 내 석유 공급이 증가하겠지만, 정유업체들이 설비를 증설할 유인은 크지 않다. 친환경 정책을 상당히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탈석유라는 기조가 사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고액의 투자가 요구되는 정유시설을 미국 내에서 신설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외 주요 경제권에서 계획하고 있는 증설 규모가 크지 않다. 중국이 정제설비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유럽 역시 증설보다는 폐쇄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본다. 트럼프 2기에서도 기존 정유사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리라고 본다.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환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4: Korea Rating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

KRIR 2024-045, 2024-11-07